

## 북한의 인터넷 산업

임을출 / 한겨레 21 북한전문기자

### 미 국방성 인터넷 홈페이지 애용 국가, 북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美 국방부를 비롯한 미군 인터넷을 가장 애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다름아닌 북한이다. 어떤 사람은 이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이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을 방문한 美 안보연구기관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지난 수년간 미군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이 가장 많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정보전’의 하나로 미군 인터넷 및 첨단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제를 교란하기 위한 자료 축적 의도라고 분석했었다. 특히 북한은 지난 6월 서해안 교전 사태 이후 정보 전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실 이제 김 위원장이 컴퓨터광이자, 하루 몇시간씩 웹서핑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북한의 인터넷 도입 역사는 90년대 초반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과학원, 노동당 중앙위 청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해 이를 연결한 네트워크 통신, 즉 인터넷을 사용해왔다. 북한은 지난 1997년 6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원격 검색시스템으로 자체 개발한 ‘광명’을 설치했다. 광명은 주로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에 사용된다. 이는 북한에도 고성능 컴퓨터가 적지 않게 도입돼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북한 엔지니어들은 인터넷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발간된 과학 잡지 「과학의 세계」 2월과 3월호에 “과학 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고속도로” 등의 글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논문이 적지 않게 발견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해외에서도 인터넷 활용 정보 수집에 혈안

또한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들은 현지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

기도 한다. 각 부문의 일꾼들이 해외 출장을 간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국에 출장 나와 가까운 사업 파트너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북한에서는 현재 외교부나 대외무역기관 등이 가장 정보화가 진척돼 있다. 실제 북한의 외교부는 근거리 통신망(LAN)이 깔려있어 인터넷은 물론, 내부 전자 결제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부서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구하지 못할 시는 제3국의 상업통신회사에 직접 국제 전화를 걸어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본국과의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식 정책적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등을 뺀 나머지 부서나 일반인의 인터넷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조만간 인터넷 도입 폭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터넷 국가코드(kp)로 등록된 호스트는 없다. 이 국가코드 kp도 북한 당국이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인터넷정보센터(ANNIC)가 등록한 것이다. 다만 유엔개발계획(UNDP) 등 평양 주재 국제 기구는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외에 웹사이트를 설치, 운영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10월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일본), 1999년 10월 조선인포뱅크(중국 베이징) 등을 구축하는 등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10여 개 웹사이트를 구축했고, 이외에도 일본에 구축된 금강산 국제그룹, 조선신보, 현해탄 소식,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 등의 홈페이지가 있다. 일본의 조선통신사(KNS)가 북한 노동당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인터넷 주소로 개설한 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www.kcna.co.jp)에는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이나 논평, 조총련계의 활동,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의 생가 사진을 실려있다. 이 사이트는 개설 초기 한때는 3개월만에 검색 건수가 수만 건에 이를 정도로 세계 네티즌들의 이용이 폭증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 무역 회사인 금강산무역의 홈페이지는 북한 여행 정보를 주로 제공했고, 일본의 김일성주의연구회가 운영 중인 다른 사이트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연

구' '주체적 사회혁명론' 등 관련 책자를 주문받아 팔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상당수 사이트를 정치색을 띠고 선전 활동을 하는 데 활용했으나 갈수록 이런 색채는 크게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최소한의 경비와 노력만으로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효용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한때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에 북한의 미녀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개설하고, 영문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검색이 가능케 하는 등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대외 선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조선인포뱅크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월 10일 조선중앙TV의 위성방송 개시와 더불어 개설한 북한의 공식 인터넷사이트(www.dprkorea.com)로, 1999년 4월15일 발족된 범태평양 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개설된 이 사이트는 북한의 뉴스, 법률, 산업, 문화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닉스를 운영체제로 삼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엔진은 나모인터랙티브에서 만든 '두레박 3.0'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런트 페이지'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서버 용량이 부족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달 안에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불편없이 웹서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문 서비스를 비롯한 외국어 서비스도 곧 시작된다. 웹디자인도 대폭 개선돼 서방 어느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 홈페이지는 협회 소개와 뉴스 리포트 등을 비롯해 ① 공지 사항(북한 소개), ② 법규집, ③ 주요 업체 소개(대외 협력 업체), ④ 산업 정보, ⑤ 문화 광장 등 모두 15개 항목에 걸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북한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북한 스스로 밝히는 이 홈페이지 개설의 목적은 '대외 협력 및 교역 관련 안내 창구 마련'이다. 산업 정보란은 북한의 주요 산업 동향을 실고 있으며 무역 창구란을 통해서도 북한의 수출 품목을 골라 실제 거래도 할 수 있다. 원래 우리의 자연 토론방과 비슷한 방명록란도 만들었으나, 남쪽 사람들이 북한체제를 헐뜯는 욕설로 채워짐에 따라 폐쇄했다.

### 본격적인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내부체제 정비 착수

북한은 자체 인터넷망 구축에도 열을 쏟고 있다.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화 자동화 디지털화 전자 계산기화를 추진했으며, 이미 평양, 사리원 등 주요 도시간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했다. 북한의 광케이블 공사는 지난 1990년

중반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 아래 평양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총연맹도 광섬유와 디지털 방식의 전송 설비 생산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안북도 체신관리국은 도내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광통신 케이블 설치 2단계 공사를 마치고 최근 개통했다. 지난 1998년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시와 도내 16 개 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400 km의 '빛(광)섬유 통신카벨(케이블) 공사'를 끝냈던 평북도 체신관리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근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북한의 광통신 케이블 가설 공사는 '전화의 자동화, 숫자화, 빛섬유 카벨화, 전자 계산기화의 실현'이라는 통신 현대화 개념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e-메일 왕래나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민대학습당의 경우 일반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각, 성, 중앙기관, 공장기업소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망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낙원기계공장기업소의 기사장은 자기 사업소에서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에 들어와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곳은 각 도·시·군 도서관은 물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김일성종합대학, 의학과

학원, 발명국 등이다.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봉사하라는 김정일 총비서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은 또한 컴퓨터의 보급 상황 및 다루는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컴퓨터 개발 수준은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사일 발사 분야 등 일부 군사 부문에서는 기술이 앞서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컴퓨의 대중화 문제다. 남쪽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인터넷 열풍이 북한 내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 유통을 단속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도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 컴퓨터 자체가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은 80년대부터 각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를 증설해 양성소 신설 등 외형적인 기술 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왔으나, 컴퓨터 보급률 저조와 교육체계의 부실 등으로 기술 인력의 질적 저하 현상을 불러왔다. 북한은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컴퓨터센터 등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기관을 통한 제3국과의 기술 제휴 및 재일 조총련계의 교수 인력 초청 등으로 선진 기술 도입에 적극 매달려왔다. 또 북한에서도 지난 1998년부터 고등중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김정일 총비서는 1998년 2월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 많은 북한의 대학에 프로그램 학과를 신설토록 했다.

최근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정보센터'가 북한내 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보센터가 김책공대에 설치된 것은 과학자·기술자 양성 필요성을 절감한 김정일 노동자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센터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 이과대학을 졸업한 20~30대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김 총비서로부터 '금시계'를 선물받기도 한 신진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센터에서는 통신·네트워크를 포함한 기계 번역,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화상 인식과 관련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여러 나라의 기술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돼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10, 20대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이론만 놓고 볼 때는 세계 시장에 내놓도 손색이 없을 정보이나, 직접 첨단 기기를 다뤄볼 기회가 자주 없어 실전에 약한 게 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해커' 방지에 가장 신경

어쨌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에서도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의 나진·선봉지역에 태국의 록슬리가 통신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이를 통해 중국에 있는 인터넷 서버와는 당장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금 인터넷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터넷망 연결에 대비한 치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쪽 인터넷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분야가 '해킹'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본격적인 인터넷망 개설을 앞두고 해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가장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킹을 막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른바 우리식(북한식)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면 해커가 잘 들어올 수 없다고 보고, 넷(net)와 관련된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로동신문」도 최근호(2월 24일)에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해 북한 당국이 갖고 있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줬다. 신문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 다른 나라나 회사의 비밀을 탐지하고 경제 및 군사 분야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면서 CNN, 아마존 등 미국의 유명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은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인터넷망을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시킬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에 관한

집중 연구도 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국제 인터넷망 개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첨단 정보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북한으로서는 인터넷이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 뜨거워지고 있는

### 남북 정보통신 분야 교류 협력 열기

남쪽 기업들은 오는 6월 1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북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 인프라 구축이 남북 경협 선결 요건으로 꼽히면서 대북 사업 추진의 전면에는 통신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또 국내에서 이미 검증받은 기술력과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 진출을 서두르는 벤처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쪽도 첨단 정보 산업인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이들 정보통신 분야 벤처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현재로서는 물자 교류(전자 상거래, 무역 등)와 인터넷 문화·예술 방면의 교

류, 인터넷 게임 교류 등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비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대외 교류가 북한을 소개 홍보하고,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남쪽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북한은 고객 유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고려호텔, 고려항공, 평양골프장 등의 예약 시스템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사업을 주도해온 현대가 실무 작업에 들어간 인터넷 사업의 경우, 북한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제품의 수출을 위한 기업간(B2B) 전자 상거래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대측은 일부 유럽 업체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의 통신망 사업에 국산 전전자 교환기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북쪽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세통신은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5월까지 북측과 기본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강산 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8회선의 남북 통신 회선은 4,000회선으로 대폭 늘고 CDMA 방식 유·무선망을 개통한 뒤 통천공항, 서해안공단 통신망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통신도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관계자 5명을 평양에 보내 북한 체신청 및 조선체신회사 관계자와 만나 북한 통신망 현대화 참여 의향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SK텔레콤 등 휴대 전화 사업자들

도 북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업들도 북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스젠(www.sysgen.co.kr)은 북한의 인터넷 사업 기구인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약칭 범태)와 인터넷으로 1,000만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주선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르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스젠은 또 인터넷 게임 개발 전문 업체인 조이포유(www.joy4you.com)와 협력해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단오날인 6월 6일 남북 대표 인터넷 바둑 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마추어 바둑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래더 방식(여러 사람과 대국을 벌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1위가 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급수에 따라 점수가 달리 부여됨)으로 예선 경기를 벌여 남쪽 대표 6 명을 선발한다. 최종 예선을 통과한 남쪽 대표 6 명과 북쪽 대표 6 명은 6월 6일 베이징에 설치될 은별바둑 게임 서버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만나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유니언커뮤니티(www.unionzone.com)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 토탈 서비스를 추진, 북한 관련 포털 서비스 및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경운 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의 지원을 받아 한

빛은행과 공동으로 북한 금융 기관과의 제휴도 모색 중이다. 또 조선인터넷(www.dprk.com)은 북한 관련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이 합작으로 평양에 인터넷 TV 방송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인터넷 TV 방송사는 국내 벤처 기업이 취재, 편집, 통신 장비 등을 공급하고, 북한측이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북한은 인터넷 TV 방송사가 설립되면 ① 북한산 제품의 쇼핑몰을 구축하고, ② 다른 나라와의 교역, ③ 북한 명승지 관광 안내 창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남북한 당국자 접촉에서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인터넷 상봉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통신 관련 국내 벤처 기업들은 최근 남북한 합작 인터넷 TV 방송사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합작 모델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남북한간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인터넷 프로그래머 등 기술자를 북한으로 보내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솔루션 개발 업체인 EGC&C는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이형철 대표대사와 국제 한민족 인터넷 방송인 한터넷 사이에 합의된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만남'에 자

사의 멀티캐스트 기술을 제공키로 한터넷과 합의했다. 심지어 정부는 오는 6월에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인터넷 방송과 같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① 인터넷 회담 중계, ② 위성 중계 방송, ③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취재 기사 직접 전송 등이다.

하지만 지금으로 가장 중요한 조처는 역시 인터넷 교류의 첫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국가 인터넷 사이트로 지정한 조선인포(www.dprkorea.com)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활용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산업 정보를 위주로 하는 '미러사이트(Mirror Site)'를 국내에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부 기업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통일부에 협력 사업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정부, 남북한 사이버 통일시대 대비

사실 지금까지 대북 수출 규제에 묶여 경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질적인 경험보다는 북쪽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전의 對공산권 전략 물자 수출 제한 규정(COCOM)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이 그

간 정보통신 분야의 대북 경험 확대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통신부·통일부·국방부·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통신 사업자로 구성된 '남북한 통신 협력을 위한 전담반'은 북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최대 걸림돌인 이른바 '대북 수출 제한 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또 전반적인 대북 통신, 인터넷 협력 사업과 관련해 미국 서방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그대로 둘 경우 인터넷 관련 특정 통신 장비의 대북 반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또 벤처 기업의 대북 투자는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가급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러 기업이 함께 진출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로서는 특히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신망 인프라 통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남북 교규에도 새로운 유형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 형태에 대한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규의 적용 기준을 만드는 데도 부심하고 있다. 바야흐로 남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통일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